

# 광주 일부 대형교회 주일 예배 한다는데...

행사·모임 자제 요청 속 중앙·동명·겨사씨교회 등 진행키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불안...“사회적 책임감 가져야” 목소리도  
신도 가장 많은 월광교회 유튜브 예배 검토...제일교회는 취소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면서 개신교계 대형 교회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등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사나 모임을 자제토록 권고하는 상황이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취소하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가톨릭교회가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16개 교구 모든 성당의 미사를 중단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교회도 주일 예배 중단 및 가정·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신교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7일 광주 개신교계에 따르면 광주 중앙교회를 비롯해 동명교회, 광주겨사씨교회 등 지역 대형교회들이 오는 3월 1일 주일 예배를 진행키로 했다. 동명교회 관계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진행하자는 신도들의 의견이 많아 주일 예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회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일 예배 참가자도 줄었고 집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교회 3곳 신도

만 1만명이 넘는다. 주일 예배의 경우 신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로, 현재 2000명을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확산세를 고려하면 자칫 주일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당장,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 이어 강남의 대형교회인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주일예배를 통해 ‘슈퍼 전파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행사·모임 등의 자제를 요청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민간영역이나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중집회 및 행사 등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담화문까지 낸 점을 고려하면 교회가 갖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

도 나온다. 이미 주일예배 중단에 참가한 교회도 상당하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월광교회는 주일 예배 대신, ‘유튜브’로 자택에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광주제일교회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일 예배를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주일 예배 헌금이 교회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교단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교제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교회가 제공하는 공동식사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헌금을 걷기 위해 주일 예배를 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외부인 예배 참석 통제 위해 신원 확인 지난 23일 오전 광주 한 교회 관계자들이 외부인 예배 참석을 통제하기 위해 신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 광주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거리 활보

헬스클럽 등 다닌 20대 고발  
세밀한 관리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던 20대 광주 신천지 교인이 보건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두 차례, 발열·거주지 이동 유무를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인 ‘자가격리 지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광주일보 2월 26일 6면) 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보건소는 지난 26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리를 돌아다닌 A(24)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택 격리 지침을 어겨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고발됐다. 현행법은 자택 격리 대상자의 경우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가족과 합

계 생활하는 경우에도 화장실도 따로 써야하는 등 독립된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건소측은 지난 26일 “자가격리자라고 밝힌 2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신고를 받고 택시 탑승 위치를 토대로 자택 격리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씨가 이날 지침을 따르지 않고 헬스클럽 등을 다닌 정황을 확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신천

지 예배를 다녀온 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음달 2일까지 자택에 격리됐었다. 경찰은 비대면 조사를 통해 A씨가 주거지가 이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택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해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가 지난 26일 의결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에는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이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공소장 속 세월호 참사 당일 보니

## 구조 대신 “승객 안정시켜라” 엉뚱한 지시 “퇴선명령했다고 정리하라” 해경 기록 조작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퇴선이나 구조 대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게 하라는 등 엉뚱한 지시만 내린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공소장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파악한 참사당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세월호는 참사 당일 오전 8시52분께 좌현으로 45도 기울었고, 오전 9시34분께는 약 52도로 기울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해경 지휘부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만 내렸다고 특수단은 판단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이 세월호의 4층 좌현 갑판까지 완전히 침수된 이후인 오전 9시53분께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경과 세월호 사이 초기 교신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은 오전 8시52분께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3분 뒤인 오전 8시55분께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고 교신했다. 특수단은 당시 서해해경청 소속인 진도

VTS가 오전 9시6분부터 오전 9시37분까지 세월호와 VHF로 교신을 계속하면서 급박한 전복 상태나 승객들의 대기 상황 등을 파악하고도 교신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봤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오전 8시54분부터 세월호 승객과 선원 등으로부터 다수의 122신고를 접수했고, 해경 상황실 역시 목포해경 상황실 등으로부터 관련 교신을 받았지만 후속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또 각 구조본부가 오전 8시57분부터 ‘세월호에 350여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고, 좌현으로 50도 정도 기울어 침몰 중’이라는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 등에 상황 전파를 하면서도 초계기·헬기 등 항공 구조세력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현장 구조를 담당할 김 전 서장이 실제와는 달리 사고 초기부터 승객 퇴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할 자료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는 김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전 9시5분께 퇴선명령을 했으니 기록하라”며 지휘함인 3009함의 이모 합장에게 지시하고, 이 합장은 퇴선명령 기록이 없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고 보고하고 자료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지원 업무 전주시 공무원 승진 채 발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업무를 맡던 전주시 공무원이 자택에서 승진 채 발견됐다. 27일 전주완산경찰에 따르면 전주시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A(43)씨가 27일 새벽 1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일 전주에서 코로나19 두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신천지 전수조사를 위한 행정요원 교육 지원이나 청사

방호 등 업무를 하느라 주말에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기 전날에도 밤 11시가 넘어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아내에게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관련해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백기섭 기자 parkks@

## 흡친 승용차로 150여km 질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들

○...흡친 승용차로 면허도 없이 150여km를 질주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10대 3명이 경찰서행. ○...27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A(16)군 등 3명은 지난 26일 밤 11시 20분께 광양시 금호동 도로에서 흡친 차를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광주에서 SM5 승용차를 훔쳐 광양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다 도난차량임을 알고 추격하는 경찰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하동까지 달아났다가 결국 검거. /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815**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